

# DDA협상 결렬과 한국농업 · 농촌을 위한 제언

개방 가속화 · 농업성장 정체 · 농업비중 축소 예상, 변신 · 전환 요구  
농업 농촌현실 크고 작은 장애 존재, 국민 이해 · 설득노력 지속해야

**DDA** (Doha Development Agenda)는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이듬해 12월 시애틀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그동안 DDA협상은 2003년 2월 도쿄,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농업부문 교역자유화 관련 초안을 마련하고,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한 제5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역시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 후 몇 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WTO 제6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시한을 연장하면서 타결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2006년 6월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올해 7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

된 WTO/DDA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분야의 세부원칙에 대하여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지만 일부 쟁점에서 미국, 인도, 중국 등 나라 간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번 협상 실패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를 둘러싼 인도와 미국간의 대립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계산적, 구조적인 복잡한 이해관계가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이고, 인도 총선이 내년 5월로서 무역자유화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최근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인도의 커진 목소리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는 DDA협상에 대하여, 각국들이 별로 관심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국의 농업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자국 시장

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계산이다.

셋째는 모든 의제에 대한 협상 결과를 하나의 패키지로 수용해야 하는 현행 일괄 타결방식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분야별 복수협정체결방식이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DDA협상은 가을에 한 차례 재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 의견은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이고 미국 대선과 2009년에 새 정부의 출범, 인도 총선, WTO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EU 집행위원의 교체가 마무리 되는 등 하반기가 되어야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DDA협상과 농산물 협상전략

DDA농업협상은 크게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의 세 가지 분야로 대별된다. 시장접근 분야는 품목별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물량(TRQ) 및 특별긴급관세(SSG-special safeguard)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국내보조 분야는 각국이 농업분야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 및 보조금 한도의 감축에 대하여, 그리고 수출경쟁 분야는 수출보조금 및 식량원조 등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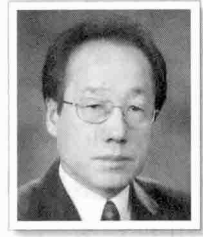
이번 7월 각료회의에서는 관세감축률, 특별품목, 민감품목, 관세상한, 보조금 감축률 등 주요 부분에서 대체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나머지 쟁점은 개도국의 특별긴급관세(SSM), 면화보조금, TRQ 신설, 관세단순화 등에 이견이 있었다. 개도국의 특별긴급관세는 수입

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시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이다. 이 특별긴급관세에 대하여 미국과 인도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자 EU가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결국 미국은 기준 무역왜곡보조총액(Base DTDS) 감축문제로 수세적 입장인데다, 개도국의 특별긴급관세의 신설도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인도는 농업의 경우 수출국, 수입국이란 양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DDA협상 타결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도 대다수 소농의 피해로 인한 정치적 영향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G7의 잠정 타협안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할 때, 농산물 분야에서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일말의 아쉬움을 갖는다. 이제 DDA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상정할 때 2010년 말 타결, 그리고 국내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2 이행이 가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DDA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하는 세밀한 협상전략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고율관세 품목 농산물이 다수이기 때문



황민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에 관세감축 부분에서, 관세상한, 특별품목,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G10(수입국그룹)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일률적인 관세상한 도입에 대응하고, G33(개도국그룹)과도 공조하여 일부특별품목의 관세감축 최소화에 노력해야 하며, G10과도 공조하여 주요 품목에서 민감품목 지정을 이끌어내는 노력 등 전방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새 정부, 농업정책의 방향

새 정부는 새로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기구를 개편, 출범하였다. 농정의 비전과 목표를 “일류 농림수산 식품”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그리고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체제를 극복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신발전 체제를 지향” 하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유능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영농주체의 발굴, 육성, 그리고 효율적 생산·가공·유통의 주체 육성 및 조직화 등 유통혁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여건이 갖춰진 정주공간 조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광우병 파동”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고, 끝내 장관이 바뀌는 등 커다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제 새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책의 줄거리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추진 내용과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 장관은 농림부 정책국장 재임시, 농산업의 환경변화에서 지금까지는 인구가 증가되었으나 앞으로는 감소되어 지금처럼 출산율이 줄어든다면, 2017년에 최대가 된 후 2100년에는 1600만명으로 줄어들고, 65세 노인 인구가 45%에 달할 것이며 농업인구도 2013년에는 현재의 50%인 175만명, 농가호수는 80만호로 감소가 예상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 뿐만 아니라 쌀 소비 감소와 쌀 수입이 증가하면서 쌀 재배면적은 2004년 112만ha에서 2013년에는 80만ha까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농업생산구조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개방은 가속화될 것이고, 농업부문의 성장은 정체화 예상되며, 국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일대 변신,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 장관은 한국농산업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농업의 희망을 위해 제일 먼저 농가의 생산성을 꼽았다. 이를 위하여 첨단기술의 활용, 외연의 확대, 가치창출, 마케팅과 경영의 규모화, 그리고 수출농업 육성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의 사례로 하림, 장생도라지, 파프리카, 도드람 양돈 등 농업생산, 경영, 유통, 수출, 가공 등 분야에서 성공적인 인물과 사업, 그리고 이들의 성공요인을 주목하고 있다. 물론 농업 농촌의 현안과제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농업 농촌 발전 위한 제언

한국 농업 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고, 이들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그만 차이라고 해도 소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한국농업정책의 출발은 영세한 구조적 특성을 개방, 그리고 대량소비, 대량유통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전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경영의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되어야 하고 첨단기술 도입, 효율화, 수익성 나는 경영체로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크고 작은 장애가 대내외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은 있어도 추진내용, 체계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

농업을 이어갈 후계세대의 육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책은 이들이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기에는 교육, 복지는 물론이고 농정지원체계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열악하다. 농업을 열심히 경영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정책비전이 확고하여야 한다. 젊은이가 도전해볼만한 산업으로서 농산업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농업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동력, 효율이 있을 것이다.

농산물유통혁신을 농정의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시장의 변화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직거래, RPC/APC, 이체는 1시군 1유통회사 등 다양한 유통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인 생산구조가 전문화, 규모화, 조직화되지 않는 조건, 생산자조직인 협동조합의 이 부문에서의 역할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농산업, 농촌, 지역의 주체, 주인인 농업인, 지역 주민의 주인의식,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업 농촌의 경제외적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 특히 식량의 안정, 안전성의 강화, 농업 농촌의 전통 문화, 관광 휴식 레저,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때만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농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국민농업”이 삶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물론 이의 앞장, 선두에는 농업인, 모든 농가족(農家族-Agricultural Family)이 서서, 모든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Y